



주간통일정세 2010-20(2010.05.10~05.1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2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성과 만족(5/11,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김성남 북한 조선노동당 국제부부장은 북한을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북일우호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방중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경제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완벽하게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함.
- 김 부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에 통역으로서 김 위원장을 수행

● 北, 김일철 국방위원..모든 직무 해임(5/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제06호에 따라 김일철(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연령상 관계(80살)로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1부부장의 직무에서 해임되었다.”고 전함.
- 김일철은 1982년 6월 해군사령관에 임명된 뒤 10년 만에 그 자리에서 대장(1992.4)으로 승진했고, 차수(1997.4)를 달면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기용. 그 이듬해인 98년 9월 ‘김정일 체제 1기’ 출범과 함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에 올라 작년 2월 김영춘에게 넘겨줄 때까지 만 11년간 인민무력부장을 지냄.

● 김정일 방중일정 하루 단축(5/16, 아사히신문;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달 초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베이징 체류 일정을 하루 단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한국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이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정을 단축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이 불화로 종료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함.
- 당초 일정은 김 국방위원장이 6일 밤 베이징에서 북한 가극단의 공연을 후진타오 주석과 함께 관람한 뒤 7일 베이징을 떠날 예정
-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 내에서는 김 국방위원장의 일정 변경의 배경에 북한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상황증거도 있다고 보도
- 중국 정부가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과 미국 일본에 설명할 때



-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작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북중 국경의 교량건설 등에 약 3천만 달러의 무상지원을 발표했던 것과 비교된다는 것
- 또 김 국방위원장이 한국 정부가 예상했던 6자회담 예비회담에 대한 지지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도 이상하며,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후진타오 주석의 내정을 포함한 정보교환 요청에 김 국방위원장이 흔쾌히 찬동했으나 북한 매체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부자연스러움.

■ 김정일 동향

- 5/11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5/11, 중방)
- 5/13 김정일 국방위원장, 상서청년광산 등 “援軍美風”을 발휘한 일꾼·종업원들에게 「감사」 전달(5/13,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이번 비공식 訪中(5.3~7) 관련 北-中 관계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이 굳건하고 위대하다”고 친선, 연대성 과시 및 “대를 이어 끊임없이 강화 발전할 것” 강조(5/13, 중통)

나. 경제

- 北, 中기업에 인사·노무관리 등 탄광운영권 넘겨(5/10, 데일리NK)
 - 데일리NK는 ‘중국의 대북소식통’을 인용, “함경북도를 대표하는 새별지구탄광연합기업소가 최근 고건원탄광과 룡북청년탄광에 대해 중국 기업과 ‘합작 계약’을 맺으면서 인사, 자재, 근로방식 등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권을 중국 기업에 넘기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힘.
 - 소식통은 “탄광의 노동자 숫자, 식량배급, 임금 지급, 자재 사용 등에서 모든 권한을 모두 중국 기업이 갖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탄광 내 기술, 행정일꾼 수를 대폭 줄이고 실제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대거 늘렸다.”라고 소개
 - 그는 “이 같은 합작 방식에 대해 북한 노동자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임금과 식량배급이 보장될 뿐 아니라 최신 갱목 같은 자재가 투입돼 작업환경이 좋아지면서 출근율과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함.
 - 이 중국 기업은 기계설비와 자재, 자금 등을 제공하는 대신 생산량 60%에 대한 소유권을 챙기며 탄광의 운용에 대해서는 탄광 당위원회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성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짐.



● 北, 1분기 對中무역적자 2억3천만 달러..51.6%(5/11, 미국의 소리 (VOA))

- 방송은 북한의 올해 1.4분기 대 중국 무역적자가 미화 2억3천200만 달러로 작년 동기(1억5천300만 달러)보다 51.6% 늘어났다고 중국 상무부 통계자료를 인용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수입은 이 기간 3억5천9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반면 수출은 1억2천700만 달러로 17% 줄었음.
- 월별로 북한의 수입은 1월 1억1천200만 달러, 2월 1억1천700만 달러, 3월 1억3천만 달러였고, 수출은 1월 3천600만 달러, 2월 3천500만 달러, 3월 5천600만 달러이며, 방송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약 15억 달러까지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말함.

■ 기타 (대내 경제)

- 평양 대성산 기슭에 조성중인 평양민속공원 안에 한반도 모양의 인공섬 모습이 구글어스를 통해 드러남(5/15, 연합뉴스)

다. 사회·문화

● 北식량난 ‘고난의 행군’ 때와 비슷(5/10, 자유북한방송)

- 방송은 중국 지린성의 자사 통신원을 인용, “중국에 건너온 북한 주민이 ‘며칠 전 장군님(김정일)이 중국에 갔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식량 원조를 주지 않으면 무리죽음(떼죽음) 난다’고 말했다.”고 전함.
- 식량을 구하기 위해 몰래 두만강을 건넜다는 이 북한 주민은 또 “집집마다 뗏머리가 없어 풀죽으로 연명하는 상황이고 나물 캐는 여자들이 산이 뒤덮일 정도”라면서 “국경 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낫지만 함경남도 단천 같은 안쪽(내륙지역)은 정말 한심하다.”라고 방송에 말함.
- 이 주민은 “먹는 입을 열기 위해 남자들은 농촌동원에 스스로 나서기도 한다.”라면서 “사람들은 북조선(북한)의 쌀이 바닥났다는 것을 알고 중국에서 쌀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방송은 전함.
- 한편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는 북한 내 통신원을 인용, “올해 농사를 위해 북한의 전 주민이 동원되고 있는데 황해북도의 경우, 5월 6일부터 7월20일까지 ‘농촌총동원 기간’으로 정해졌다.”라면서 “중학교, 대학, 군대 같은 비생산단위는 물론 생산단위도 농촌에 동원되고 있지만 식량과 부식물은 거의 자체 해결해야 한다.”라고 전함.



● 北량강도서 방화 추정 불 잇따라(5/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최근 북한 량강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정치사회적 불만을 품은 방화로 보고 주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
- 또한 방송은 복수의 량강도 내 소식통을 인용, “요새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살림집(주택)들이 여러 채 불타 보위부와 검찰이 수사에 총동원되고 있다.”라며 “당국은 사건의 단서를 찾기 어렵자 ‘내부 적대분자들의 책동’으로 규정하고 주민 동태를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힘.
- 이런 사건들이 북한 당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달 17일 자정께 혜산시 혜산동에서 일어난 5층 아파트(70가구 거주) 화재라고 방송은 전함. 이 불은 김일성 생일(4.15) ‘특별경비주간’에 일어나 북한 당국이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고 범인 검거에 안간힘을 쏟았으나 사건 현장에서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방송은 설명
- 방송은 “최근 방화사건이 관심을 끄는 것은 1998년 대량아사 사태 때 주민들의 무차별 방화가 이어졌던 기억 때문”이라며 “당시 량강도 예술극장과 도 인민위원회 사무처 건물도 전소되고 도처에서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건물이 소실됐다.”라고 말함.

● 北감독 ‘16강 자신 있다’(5/11, 조선신보)

- 신문은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축구대표팀의 김정훈 감독이 16강 진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 김 감독은 지난 8일 스위스 전지훈련을 떠나면서 가진 인터뷰에서 “월드컵 본선의 조별 연맹전을 통과하는 것이 1단계 목표인데 강팀들과 대전이지만 배짱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며 “개별 선수들의 육체, 기술 수준이 몰라보게 발전하고 팀의 전반적인 위력이 향상한 조건에서 결코 실현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함.
- 그는 또 본선 진출을 확정된 이후 10여 차례의 해외 경기를 통해 “선수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배짱을 가지게 됐다.”라면서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정대세(가와사키), 안영학(오미야), 량용기(베갈타 센다이) 3명의 재일동포선수들이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함.
- 북한팀 주장 홍영조는 “우리 팀에 첫 경기는 매우 중요하다. 강팀인 브라질팀을 누르면 팀의 사기를 올릴 수 있고 그 후의 경기에서도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소감을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5/11일 개성에서 남·북·해외 실무 접촉을 가진 결과, 올해 6.15 10주년 행사를 평양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5/12, 연합뉴스)
- 北 각지 농촌들, 버모판 관리와 모내기 준비사업 활발히 진행(5/10, 중통)
- 조선노동당출판사, 회상실기집 '인민들 속에서(88)' 출판(5/10, 중통)
- 재일동포조국방문단(단장 : 이청자), 5/10 평양 도착(5/10, 평방)
- '모든 힘을 모내기에 총집중, 총동원하자'...“모내기는 한해 농사에서 중요한 영농과정”이라며 쏘민 제철 모내기 완료 독려(5/11, 노동신문)
- 北 중앙동물원, 아프리카 사자 1쌍 등 6종, 22마리 동물들 합류(5/11,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담배밀수' 北외교관, 스웨덴서 집유 석방(5/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담배 밀수 혐의로 스웨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박응식 씨가 형기를 2개월 남긴 지난달 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보도
 - 방송은 스웨덴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박씨가 4월30일 집행유예 1년으로 석방됐다”면서 “대법원에서 상고 신청이 기각된 이후 다시 집행유예를 신청했는데, 구치소에 6개월 동안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받아들여졌다.”고 전함.
 - 박씨는 지난해 11월 러시아산 담배 23만 개비를 스웨덴에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체포된 후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 北, 美에 '평화보장체계 수립' 재차 요구(5/13,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평화보장체계 수립은 급선무'라는 개인 필명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대결을 끝장내기 위한 급선무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
 -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2차 핵실험 이후 자신들에게 가해진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고,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신문은 또 “우리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해 놓지 않았더라면 이라크와 같이 전쟁의 참화를 뒤집어쓴 지 오래됐을 것”이라면서 “제



재와 군사적 압력은 우리나라에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강변

● 러시아 극동서 北노동자 2명 망명신청(5/13, 연합뉴스)

- 북한 노동자 2명이 지난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들어와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러시아 보안 당국자들을 인용 보도
- 총영사관 담을 넘어 들어온 이들은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시설 건설 작업에 투입돼 러시아로 온 것으로 알려짐.
- 통신은 인근의 다른 건설현장에도 북한 노동자가 많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함.

● 北, 이스라엘 외무장관 ‘악의 축’ 발언 비난(5/15,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최근 북한을 시리아, 이란과 묶어 새로운 ‘악의 축’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없는 사실을 날조해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북)을 감히 비방 중상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리베르만 장관의 발언은 “유대인 정착촌 확장으로 세계적 비난과 배격을 받으며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을 모면하려고 나온 파렴치한 발언”이라며 그를 “유대 복고주의자의 전형”이라고 비난, “우리 공화국은 어떤 대량살육 무기 전파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
- 리베르만 장관은 지난 12일 일본 방문 중 북한과 시리아, 이란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이들 국가가 대량파괴무기를 생산·확산시키면서 세계안보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난함.

■ 기타 (대외 일반)

- 스위스 여성대표단(단장 : 하그 카르만 그리스도교민주당 위원장), 5/11 평양 도착(5/11, 중통)
- 日 후쿠오카현 일조우호협회 대표단, 5/11 귀국(5/11, 중방)
- 최태복(黨 비서), 5/12 駐北 新任 인도대사 프라타프 싱과 담화(5/12, 중통)
- 김영일(내각 총리), 스리랑카 新任 수상 디 엠 자일라트네에게 5/11 축전(5/12,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 핵융합 기술 자체 개발(5/12,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1면 기사에서 “조선의 과학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했다”며 “핵융합 성공은 발전하는 조선(북한)의 첨단과학 기술 면모를 과시한 일



대 사변”이라고 보도

- 신문은 이어 “우리 과학자들은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100% 자체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마침내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면서 “이 과정에 우리 식의 독특한 열핵 반응장치가 설계 제작되고 핵융합 반응과 관련한 기초 연구가 끝났다”고 덧붙임.
- 신문은 또 “원천이 무진장하고 환경 피해가 거의 없는 안전한 새 에네르기(에너지)를 얻기 위한 핵융합 기술은 오늘 세계 과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핵융합에 성공함으로써 새 에네르기 개발을 위한 돌파구가 확고하게 열렸다”고 자평함.

3. 대남정세

● 北신문, 지방선거 反보수 대연합 촉구(5/15,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신문은 “자주·민주·통일을 바라는 남조선 각 정당, 단체들과 인민들이 반보수 대연합을 형성해 공동행동을 취한다면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시대에 역행하는 반역통치는 끝장나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보수세력을 정치 무대에서 몰아내려는 각계의 지향과 요구는 일치하고 있으며 투지와 기개도 충천하다”며 “단결은 투쟁의 위력한 무기며 승리의 담보”라면서 이같이 말함.

● 軍, 천안함 ‘대북성명’ 검토..파장예고(5/16, 연합뉴스)

- 군 당국이 천안함 사태를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판단하고 20일께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김태영 국방장관 명의의 대북성명 발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
- 이는 곧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미국이 ‘군사적 공격(armed attack)’이라고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 北함정, NLL침범..경고사격에 복상(5/16, 연합뉴스)

- 북한 함정이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하하다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
- 16일 함참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1척이 15일 오후 10시13분께 서해 NLL을 1.4마일까지 침범, 연평도 서북방 8.5마일 해역으로 남하하다 우리 해군의 경고통신을 받고 30분 만에 복상
- 하지만 또 다른 북한 경비정이 47분이 지난 오후 11시30분께 같은 해역으로 NLL을 1.3마일을 넘어와, 우리 해군이 경고통신을 했으나 북한 경비정이 계속 남하하자 경고사격을 2차례 했으며, 북한 경비



정은 9분 만에 북한해역으로 올라감.

- 북한 함정이 서해 NLL을 침범하기는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 천안함 사태 이전인 지난 3월의 침범 사례를 포함하면 올 들어 두 번째. 작년에는 23차례 이상 침범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경비정은 이례적으로 우리 해군의 경고방송에 ‘귀측 함정이 우리 해역에 침범했으니 즉각 이탈할 것을 경고한다’ 경고방송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짐.

● 北군부 “빠라 지속 땀 육로통행 차단(5/16, 조선중앙통신)

-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16일 남측의 대북전단(빠라) 살포가 계속되면 동·서해 육로 통행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
- 북측 단장은 이날 남한 군 당국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이 계속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조장·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대는 이미 경고한 대로 남측 인원들의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육로통행을 제한·차단하는 이상의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북측 단장은 “남측은 대북심리전 전개가 불러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사태는 남측의 북남 합의 준수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지난달 10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도 “전단 살포는 상대방에 대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확약한 쌍방 군 합의의 위반이고 전면도전”이라며 남북 간 육로통행에 대한 군사적 안전 보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기타 (대남)

- 금강산관광 파탄은 남북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南 괴뢰패당의 ‘고의적 모략책동의 산물’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현 집권세력에게 있음(5/10, 평방)
- 한나라당의 전교조 교원 명단 공개...“진보적 단체들을 와해 말살하기 위한 모략책동”으로 비난(5/11, 중방)
- 北남성 1명 서해 백령도로 귀순(5/12, 연합뉴스)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 6자회담 3단계 중재안 제시”(5/16)

- 중국이 15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6자회담 공식 재개에 앞서 예비회담 개최를 골자로 하는 ‘3단계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16일 확인됐음. 3단계 프로세스는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대화→6자회담 참가국들 간의 예비회담→6자회담 본회담 재개’의 수순이며, 북·미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중국 측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임.
- 외교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중국 측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설명하면서 기존부터 주장해온 재개수순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음. 이에 앞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측은 관련 각국과 같이 6자회담의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3단계 방안까지 제시했다.”고 3단계 중재안을 공식 확인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천안함 사건이 먼저 해결된 이후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도 “만일 북한의 관여가 명백해진다면 6자회담에 있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6자회담을 열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 “北, 핵융합 성공주장은 정치적 의도”(5/13)

- 북한이 자체기술로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대내외에 공표한 것은 과학적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발표로 보인다고 차이나데일리가 자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13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전날 “자체기술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으며 이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할 큰 이벤트”라는 노동신문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사실상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는 중국 매체가 북한을 겨냥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임.
- 신문은 그러면서 실험실 내에서의 핵융합은 새로운 게 아니라면서 만약 실제 현장에서 핵융합을 성공한다면 이는 깨끗하면서도 방사능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도 노동신문을 통해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성공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



급하지 않았음.

- 중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과학과 군사 분야에서 핵융합 기술은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그 같은 발표가 현재 뉴욕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고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에 이뤄진 점을 눈여겨 보라.”고 주문했음.
- 장 교수는 이어 “북한은 ‘핵 파워’로서 야망을 세계에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 평가했음. 그의 이런 평가는 핵융합 기술이 청정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반면 유사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 제조의 원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됨.
- 차이나데일리는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회담 복귀를 재촉받고 있는 실정이며 김 위원장이 방중기간에 회담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소개했음.
- 아울러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북한 배후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음. 이와 관련해 진찬룡(金燦榮)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북한 당국은 6자회담 재개 여부는 천안함 조사결과에 달려있다는 입장인 한·미 양국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음. 진 부원장은 “핵융합 기술에 실제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그 기술로) 핵무기를 생산할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우려했음.
- 차이나데일리는 또 연합뉴스를 인용해 “북한이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면 그 자체가 광범위한 의미에서 지난해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1874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전했음.

● 외신들, 北 핵융합 성공 주장에 회의적(5/13)

- 북한이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외신들은 일제히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음. 미국 CNN방송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핵 과학자들이 잇따라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인터넷 판에서 보도했음. 국제위기그룹(ICG) 서울 사무소의 댄 핑크스톤은 “핵융합 반응에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다”며 “북한이 시작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음.
- AP통신 역시 북한의 주장을 부정적인 톤으로 보도했음. 통신은 복수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매우 어려운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음. 포항공대의 박현거 물리학과 교수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핵융합 반응은 그렇게 간단한 기술이 아니다”고 언급,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음. 영국 BBC방송도 같은 날 인터넷 판에서 북한의 핵융합 성공 주장에 대해 “매우 가능성이 작다(highly unlikely).”고 보도했음.



● 中 “6자회담 성의·유연성 발휘해야”(5/11)

-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각국이 성의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각국이) 성의를 보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유연성을 발휘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한다.”라면서 “회담 재개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6자회담 프로세스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장 대변인의 이 발언은 “천안함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6자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임. 그의 이 같은 답변은 20일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그는 “북·중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동북아시아 각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라면서 “각자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열린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당사국이 성의를 보이고 6자회담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9.19 공동성명 합의에 근거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음.
- 장 대변인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양국의 전통적 우의가 한층 더 심화됐다.”라고 평가했음.
- 그는 “김 위원장의 방중은 고위층 교류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북·중 양국 사이의 매우 중요한 교류였다”라면서 “양국 지도자들은 회동을 통해 공동으로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해 광범위한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말했다.
- 한편 장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불행한 돌발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은 이미 한국에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가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적절히 처리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6자회담, 6~12개월 지연 전망” <美전문가>(5/11)

-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 북한이 천안함 침몰사고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6자회담이 6~12개월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D.C.의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자신의 한국방문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음.
- 클링너 연구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천안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후 복귀 여부도 조사결과에서 나오는 증거에 좌우될 것이다.”라며 “한국의 관리들은



천안함 참사 직후 북한과 같은 방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서울의 분위기를 전했다.

- 그는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을 통해 관심을 끌려고 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서 경제 및 외교적 지원을 해주곤 했지만 요즘에는 북한의 도발이 관심권에서 떨어져 과연 도발을 한다고 해서 득이 되는 일이 생길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 “북·중 관계의 요란한 선전이나 대단위 경제지원 발표 같은 게 없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부분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듯하다.”며 “중국 정부는 미국이 좋아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과도하게 북한을 밀어붙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北테러지원국 증거수집 강화”(5/16)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에 무기 수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공식적인 형태로 불거짐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증거수집 및 분석작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 국무부는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지난 11일 일본을 방문,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북한제 무기를 적재한 채 적발된 비행기는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및 가자지구의 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세력에 무기를 전달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고 언급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소식통이 15일 전했다.
- 지금까지 의회보고서 및 워싱턴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북한이 하마스 와 헤즈볼라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나 주장은 나왔지만, 특정 국가의 외교책임자가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리베르만 장관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은 물론 도쿄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 이 소식통은 “미 국무부는 지금까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적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무장세력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주장이 나온 만큼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소식통은 또 “미 의회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색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발언은 부족한 ‘로직(논리)’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계속 제외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직후 “앞으로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계속 평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법적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2009년도 테러지원국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국무부가 매년 각국의 마약거래, 종교자유,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법정 시한에 맞춰 어김없이 연례보고서를 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번에 테러지원국 보고서의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미 국무부의 관련부서 당국자는 “북한과 관련한 사항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전체적인 리뷰(검토)를 하느라 늦어지고 있다”면서 “6월초에는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 미 하원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법안 혹은 결의안을 추진 중이며,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 등도 이런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는 주장을 내놓는 등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임.

● 北신문, 美에 ‘평화보장체계 수립’ 재차 요구(5/13)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날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미국에 평화보장 체계 수립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평화보장체계 수립은 급선무’라는 개인 필명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대결을 끝장내기 위한 급선무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 이 신문은 또 “우리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해 놓지 않았더라면 이라크와 같이 전쟁의 참화를 뒤집어쓴 지 오래됐을 것”이라면서 “제재와 군사적 압력은 우리나라에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음. 한편 노동신문은 12일자 1면 기사에서 “조선(북한)의 과학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했다”고 허황한 주장을 펴,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음.

다. 중·북 관계

● “김정일 방중일정 하루 단축” <아사히>(5/16)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달 초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베이징 체류 일정을 하루 단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한국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16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정을 단축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이 불화로 종료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 김 국방위원장은 라오닝성 다롄을 경유, 이달 5일 베이징에 도착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6일 오후 베이징을 떠나 7일 아침 라오닝성 선양에 도착한 뒤 오후에 북한으로 돌아갔음. 하지만 당초 일정은 김 국방위원장이 6일 밤 베이징에서 북한 가극단의 공연을 후진타오 주석과 함께 관람한 뒤 7일 베이징을 떠날 예정이었음.
-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 내에서는 김 국방위원장의 일정 변경의 배경에 북한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상황증거도 있다고 보도했음. 중국 정부가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과 미국 일본에 설명할 때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작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북중 국경의 교량건설 등에 약 3천만 달러의 무상지원을 발표했던 것과 비교된다는 것임.
- 또 김 국방위원장이 한국 정부가 예상했던 6자회담 예비회담에 대한 지지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도 이상하며,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후진타오 주석의 내정을 포함한 정보교환 요청에 김 국방위원장이 흔쾌히 찬동했으나 북한 매체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부자연스러움. 한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후계자 문제와 경제의 개혁개방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이 이에 불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 中, 대러시아 곡물 수출에 北라진항 이용(5/14)

- 중국이 북한의 라진항 1호 부두 전용권 확보에 앞서 이미 라진항을 이용한 해상 항로를 통해 러시아에 곡물을 수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음.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북한 라진항-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 국제 항로를 통해 지난 2년여 간 중국의 곡물 5만여t이 러시아에 수출됐다고 연변일보가 14일 보도했음. 신문은 러시아 정부가 2005년 극동 육로 통상구를 통한 곡물 수입을 중단하고 해상 수송만을 고집하면서 헤이룽장(黑龍江)과 지린(吉林) 등 동북지방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러시아 수출길이 막히자 2007년 10월 훈춘과 북한의 무역회사가 러시아 수출을 위한 해상 수송 합작경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음.
- 훈춘 무역회사가 곡물을 확보하고 북한 측이 화물선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 합작경영을 통해 이때부터 지금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중국 동북 3성에서 생산되는 곡물 5만여t이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에서 라진항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운송됐음.
- 신문은 라진항 해상 항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동북 3성 남단에 있는 다롄(大連)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물류비용 증가에 따른 대러시아 수출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훈춘-라진항-블라디보스토크 해상 항로가 두만강 유역의 대러시아 교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중국은 동북 3성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을 남방으로 운송할 수



있는 해상 항로 확보를 위해 2008년 라진항 1호 부두 전용권을 확보했으며 오는 7월 훈춘-라진항-상하이 해상 항로를 개통할 계획임. 이 해상 항로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150만에 이르는 동북의 곡물과 석탄이 남방으로 운송될 수 있게 됨. 북한과 중국은 라진항을 중계 무역과 수출 가공, 보세 물류가 가능한 국제 교역 단지로 합작 개발하는 데도 합의했음.

● 中 “北 핵융합 주장, 예의주시”(5/13)

- 중국 외교부는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 마 대변인의 이 발언은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중국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임.
-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1면 기사에서 북한이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으나 한국과 미국 정부 및 국내외 전문가, 외신들은 대부분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中관영언론 “北에 핵게임 중단” 촉구(5/13)

- 중국은 13일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관영 언론을 통해 핵게임 중단을 촉구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보였음.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고만 말했지만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국제전문지 환구시보(環球時報)와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에 핵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자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북한의 대내외 공포는 과학적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북한을 감싸고 두둔해온 중국이 비록 관영 언론을 통한 것이지만 북한에 이 같이 강경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즉각 보인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북한의 핵 게임 지속 의도에 대한 경고라고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이 풀이했음.
-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같은 내용의 사설에서 북한의 핵융합 기술은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소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핵보유로 가는 길목에서 세계 대국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사설은 북한이 이 줄타기에서 주연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줄타기가 아슬아슬하고 고난도 모기가 나올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은 관객이 아니라 줄타기를 하는 본인이라고 꼬집었음. 사실은 이어 북한이 직면한 위기는 외세의 침입이 아니고 핵보유이며 핵계임을 할수록 이런 위기가 더욱 커진다고 주장하고 북한은 전략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음.

- 북한은 핵위기를 감소시켜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에 책임을 지고 자국민의 이익을 돌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사실은 주장했음. 사실은 또 북한은 수년간 자국을 우호와 친선으로 대한 중국인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안보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세계 다른 국가들이 수락할 수 있는 접근법을 택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고 말했음.
- 중국은 북한이 처한 핵위기 곤경이 북한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동북아에서 냉전시대 유물을 완전 청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사실은 다짐했음. 사실은 끝으로 동북아에서 냉전시대 유물을 완전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굳건한 평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북한 자신의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음.
- 차이나데일리는 특히 북한이 핵융합에 성공했다고 밝힌 날짜가 고(故)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안팎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그런 발표를 했다는데 무게를 뒀음.
- 중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이날 차이나데일리와와의 인터뷰에서 “과학과 군사분야에서 핵융합 기술은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그 같은 발표가 현재 뉴욕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고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에 이뤄진 점을 눈여겨 보라.”고 주문했음. 장 교수는 이어 “북한은 ‘핵 파워’로서 야망을 세계에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 평가했음.

● “김정일 방중, 北·中 이견 못 좁혀”(5/13)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13일 평가했음.
- 주평(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맥아더재단의 ‘아시아 안보 이니셔티브(<http://asiasecurity.macfound.org>)’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그의 이번 방중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큰 간극을 더욱 부각시켰다.”며 이같이 평가했음.
- 주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의 지갑을 열기를 원했고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모호한 전략을 흔들고 억제하기를 희망했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김 위원장은 중국에 예측되기를 원치 않았고 중국의 환대도 비핵화의 길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음. 그는 “북중 양국 모두 난처하



기는 마찬가지로”라면서 “불행하게도 이런 양측의 교착상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주 교수는 “천안함 사건 조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추정돼 가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정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돼 가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그는 “드라마틱하게도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중대한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음.
- 주 교수는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여전히 평화협정 논의를 고집하고 있어 북귀 의사를 천명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음. 북·중 정상 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평화협정 논의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는 것임. 그는 북한에 우회적인 경고의 메시지도 전달했음.
- 그는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흔들기를 계속하길 원하는가, 아니면 그가 남북한 균형 외교를 펼치는 중국이 이를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가.”란 질문을 던지며 “대답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음.
- 주 교수는 중국이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전원이 총출동하고 관영 중앙(CC)TV가 그의 방중 직후 일거수일투족을 특집 뉴스로 내보내는 등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을 환대했지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발언 속에는 북한에 대한 불만이 우회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분석했음. 후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5대 협력안에서 “양국 내정 및 외교의 중대문제와 국제 및 지역정세, 국정 운영경험 등 공통관심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의사소통해 나가자.”며 전략적 소통의 강화를 제안했음.
- 후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 성의를 갖고 6자회담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9.19 공동성명 합의에 근거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음.
- 나아가 후 주석이 “양국 우호관계를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김 위원장에게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주 교수는 분석했음. 주 교수는 “경직된 북한 체제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이 던지는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를 김 위원장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자바오 총리도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북·중 경제협력에 대해 발언을 했지만 중국 지도부는 대북 투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 교수는 말했음.
- 김 위원장은 “북한이 중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히는 등 적극성을 보였지만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이던 양빈(楊斌)이 2002년 중국 정부에 의해 숙청된 사건을 잘 아는 중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정부가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면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 교수



는 예상했음. 그는 이 같은 각종 근거를 놓고 볼 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통적 우호관계를 끝내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지원을 앞으로도 기대한다면 북한이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분석했음.

● 中, 훈춘-라진-상하이 해상항로 개설(5/12)

- 중국 국가 해관총서가 최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북한 라진항-상하이를 잇는 석탄수송 해상 항로의 개설을 승인했다고 연변일보가 12일 보도했음.
- 이는 북한의 라진항을 이용, 중국 동북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산물을 남방으로 운송할 수 있는 동해 뱃길이 열리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
- 이 항로는 지난 3월 착공한 훈춘-북한 원정리 간 두만강 다리 보수공사가 완공되는 오는 7월 개통될 것으로 보임. 두만강 유역의 해상 전진기지인 훈춘에서 라진항을 거쳐 중국 남방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해상 항로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북한은 2008년 중국 다롄(大連)의 창리(創立)그룹에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부여한 데 이어 지난해 라진항을 국제물류기지로 합작개발기로 중국과 합의한 바 있음.
- 중국은 올해 시범적으로 훈춘에서 생산되는 10만t의 석탄을 이 항로를 이용,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부두를 통해 남방에 공급할 계획임. 이 항로 운항이 본 궤도에 오르면 연간 150만t의 동북 물자가 라진항을 거쳐 남방으로 수송될 것으로 보임. 중국은 라진항 항로 개통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항구를 통한 동해 해상 항로에 관심을 보임.
- 북한의 청진항과 러시아 극동의 자루비노항 사용권 확보를 위해 북-러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라진항이나 청진항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두만강 유역의 대북 무역통상구인 취안허((圈河), 산허(三合), 투먼(圖們) 등과 북한 변경지역을 잇는 다리 보수공사에도 적극적임. 또 투먼-청진 노후 철도를 보수하기로 북한과 합의한 데 이어 난핑(南坪)-북한 무산 간 철도와 투먼-라진항 철도 건설을 놓고 북한과 협의 중임.
- 중국은 라진항을 이용한 해상 항로를 자국 내 물자 운송 이용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일본 등을 잇는 국제 해상항로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임.

● “中, 장기적 對北영향력 유지에 주력” <전문가들>(5/11)

- 중국이 북한의 정세변화에 대비해 북한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력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음. 중국은 사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만 놓고 본다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음.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지만, 6자회담 복귀를 확약하지는 않았음.

- 중국 입장에선 6자회담 재개도 중요하지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김 위원장의 의도를 더 명확히 읽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문가들의 분석임. 후 주석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를 포함한) 내정 및 외교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안했음. 김 위원장은 방중 일정을 소화하며 대내외에 건재를 과시했지만, 다리를 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여전히 쇠약한 모습을 드러냈음.
-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한반도 전문가 존 박 연구원은 “중국은 전제조건이 있는 (대북) 긴급구제안(bailout package)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김 위원장의 쇠약한 건강상태가 “(중국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말했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도 중국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변화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자국 입지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지적했음.
- 중국 광저우(廣州)에 있는 중산(中山)대학의 한국문제 전문가 웨이즈장(魏志江)은 “후 주석의 제안은 중국이 천안함 같은 사건들 또는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 같은 더 놀랄만한 일들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또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에 중국의 경제적 유인책에 대해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더 적극적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 같다고 분석했음. 그는 특히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설령 북한 어뢰로 판명 나더라도 중국은 이 문제를 (남북한) 양국 문제(a bilateral incident)로 다룰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음.

● “김정일, 訪中 성과 만족” <교도> (5/11)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의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성남 북한 조선노동당 국제부부장은 북한을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북일우호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방중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음.
-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경제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완벽하게 인식을 공유했다.”고 김 부부장은 전했다.
- 양국 정상은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공동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김 부부장은 설명했다.
- 김 부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에 통역으로서 김 위원장을 수행했음.



김 부부장은 또 북한 인민과 군부의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철회를 촉구했음. 북일우호협회 관계자들은 11일까지 북한에 머무를 예정임.

● “김정일 4월초 방중 계획 있었다”(5/10)

- 지난 3~7일 중국을 방문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애초 4월 초 방중하기로 북·중이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러나 중국 방문 사흘 전에 갑자기 일정 연기를 통보, 중국 측이 한때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 단둥과 선양의 대북 소식통들은 10일 “김 위원장의 애초 방중 시점은 4월 초였다.”며 “북한과 중국 관계 당국이 지난 3월 중순께 최종 조율을 거쳐 김 위원장이 4월 초 중국을 방문하기로 일정을 확정했었다.”고 말했음.
- 한 소식통은 “중국 보안당국이 3월 말께 단둥에서 보안 점검을 벌이고 선양 북한총영사관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는 등 북·중 양측이 김 위원장의 4월 초 방중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방중 예정일 사흘 전에 갑자기 ‘못 간다’고 중국에 통보했으며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중국 측이 적잖이 당황하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4월 초는 우리 정부 당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 예의 주시했던 시점이었음.
- 또 3월 말 방중 선발대로 보이는 20여 명의 북한인이 평양발 국제열차로 베이징에 도착하는 것이 목격되고 단둥 일대의 휴대전화기 불통되거나 북·중 접경지역 경계가 강화되는가 하면 대북 무역상들 사이에 북한산 물자 수송이 조만간 중단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등 잇단 징후가 포착됐음. 이즈음 김 위원장도 중국 접경인 함경도 일대를 잇따라 방문, 방중 임박설의 주요한 근거로 거론됐으나 결국 김 위원장의 4월 방중은 이뤄지지 않았음. 김 위원장의 방중 연기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당시 한국 당국이 방중 날짜를 정확히 예측,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동선이 노출된 데 따른 부담감과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북한의 요구로 늦춰진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은 이후 북·중간 재조율을 거쳐 5월 3~7일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당·정·군 합동으로 구성된 ‘국보(國保)’팀이 지난달 26일께 단둥에서 보안과 치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과 선양에서 김 위원장 방중 임박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시점도 이때였음.
- 이어 지난 1일부터 단둥에 1급 경계령이 내려지면서 단둥 역과 압록강 철교 일대의 치안이 대폭 강화되고 압록강변 호텔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 방중 징후가 뚜렷해졌으며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이를 뒤인 지난 3일 오전 5시 20분께 압록강 철교를 넘어 단둥에 도착했음.



라. 기 타

● 유엔인권최고대표 “납북 일본인 송환에 최선”(5/15)

- 나바테탐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필레이 대표는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납북자 가족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납북자들의 일본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 그는 이와 관련, 스위스 제네바의 북한 대표부와 접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가족들의 요구에 동의했다.
-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에 자국민 17명이 북한에 납치당한 것으로 보고 있음. 이 중 5명은 2002년에 귀국했으나 나머지 피랍자들의 행적을 둘러싸고 북한과 계속 갈등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北, 안보리결의 위반 무기밀수출 4건”(5/15)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무기 밀수출이 4건에 달한다고 일본의 NHK방송이 15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한에 대한 제재방식을 다루는 유엔 전문가회의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무기를 밀수출한 사례가 4건 있었으며 대상국은 이란, 미얀마, 시리아 등이라고 전했다.
- 북한은 무기 수출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엔에 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업 대신 이들 기업의 자회사 명의로 거래를 하거나 가공의 기업을 설립해 밀수에 이용하고 있음. 유엔 전문가회의의 최종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선박의 화물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전문가회의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하순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유엔 전문가회의는 작년 5월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한 뒤 안보리 결의로 설치됐으며 작년 12월 안보리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 “러 극동서 北노동자 2명 망명신청”(5/13)

- 북한 노동자 2명이 지난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들어와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러시아 보안 당국자들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 총영사관 담을 넘어 들어온 이들은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시설 건설 작업에 투입돼 러시아로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통신은 인근의 다른 건설현장에도 북한 노동자가 많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3월에도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2명이 미국 망명을 신청했고, 아무르주에서는 지난해 9월에만 12명이 한국으로 탈북하는 등 북한 노동자의 러시



아를 경유한 한국 또는 제3국으로 망명 시도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음.

- 이처럼 탈북자들이 러시아를 주된 탈북 루트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임. 러시아 보안 당국은 이들 북한 탈북자 처리가 자칫 인권 문제와 관련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경유한 이들의 망명 시도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고 불법 체류자 단속도 강화하고 있음.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유엔과 협조해 인도주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뿐”이라며 “이들의 신원과 탈북 경위 등은 만일을 대비해서 공개해 줄 수 없다.”고 말했음.

● “유엔 이달 말 방북단 파견 검토” <교도>(5/13)

- 유엔이 북한의 식량난을 둘러보기 위해 이달 말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음.
- 이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대표단이 실제로 꾸려질 경우 유엔 긴급구호기금(CERF) 관계자들을 위주로 대표단이 구성되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캐서린 블랙 부조정관이 대표단을 이끌 것으로 보임. 유엔이 방북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 ‘담배밀수’ 北외교관, 스웨덴서 집유 석방 <RFA>(5/13)

- 담배 밀수 혐의로 스웨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박응식 씨가 형기를 2개월 남긴 지난달 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음.
- 이 방송은 스웨덴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박씨가 4월30일 집행유예 1년으로 석방됐다”면서 “대법원에서 상고 신청이 기각된 이후 다시 집행유예를 신청했는데, 구치소에 6개월 동안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 “싱가포르 기업, 北유전개발 참여” <RFA>(5/12)

-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는 ‘조선에너지’(Chosun Energy Pte Ltd)사가 지분 인수 방식으로 북한의 동해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음. 이 방송은 “조선에너지가 영국 유전개발회사 ‘아미넥스’(Aminex)의 북한 동해유전 사업 지분 중 절반을 인수했다”며 “아미넥스의 개발 사업권과 유전 채굴기 지분의 인수대금으로 각각 미화 50만 달러씩 총 1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해 최근 76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 방송은 이어 “북한 내 천연자원 개발과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개발투자펀드’의 책임자인 영국인 콜린 맥아스킬(Colin McAskill) 씨가 조선에너지의 자금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투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아미넥스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09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동해상의 5만8천km² 광구 개발에 대해 북한 당국과 협상중이며, 올 상반기에는 재개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 아미넥스는 2004년 북한 측과 동해 동한만 분지(The East Korea Bay Basin)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탐사, 시추, 생산분배하는 내용의 계약(20년 기한)을 체결했으나, 지질탐사 결과의 공개를 꺼리는 북한 측 태도로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2008년 2월 사업이 전면 중단됐음.

● 이스라엘 “북한이 시리아에 무기 공급”(5/11)

- 이스라엘은 11일 북한이 시리아에 대량파괴무기(WMD)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일본을 방문 중인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외무장관은 이날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북한의 활동이 동아시아와 중동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리베르만 장관은 “북한과 시리아 간의 협력은 경제발전이 아니라 대량파괴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외무부가 전했다. 그는 이런 양국 간의 무기거래의 증거로 지난해 말 태국에서 북한제 무기류가 적발된 사건을 들었음. 태국 보안당국은 작년 12월 12일 방콕 공항에서 북한제 무기 35t이 실린 그루지야 국적의 화물기를 압류했으며, 당시 미국 정보기관은 이 무기류의 최종 목적지가 중동 지역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리베르만 장관은 또 시리아는 북한산 무기를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가자지구의 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세력에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지난 2일 북한이 이란과 레바논, 시리아를 위한 ‘무기 면세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었음.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내 핵의혹 시설을 공습해 파괴한 바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천안함 모든 면에서 의견합치”(5/15)

- 한·미 양국은 14일 워싱턴에서 ‘2+2 외교·국방 장관회의’의 실무 준비를 위한 차관보급 회의를 열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인식을 재차 공유하고,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조율해 나



- 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천안함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없었고, 모든 면에서 의견의 합치를 이뤘다.”며 “자세한 것은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나중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 차관보는 천안함 사건 대응 방안과 관련, “여러 가지가 논의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우선 조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될 예정”이라며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음. 전시작전권 전환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전작권 문제는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현재 한미 간의 현안이 아니고 이번에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음.
 - 그는 이번 차관보급 회의 의제에 대해 “오늘 회의는 금년 중 개최될 예정인 ‘2+2 장관급 회담’의 예비회담 성격을 지닌 준비회의”라며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될 여러 의제들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장‘2+2 차관보급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 차관보와 장광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윌레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가 참석했음.
 - 이 차관보는 이날 오후 ‘2+2 회의’와는 별도로 캠벨 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과 개별 회동을 갖고 천안함 사태 등 한·미 양국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정부의 고위 외교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천안함 사고를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천안함 조사는 원인을 규명하고 누구의 소행인지를 밝히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경제전략 대화’에서 천안함 문제가 거론되도록 양국 정부에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조방안을 다각적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이런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임을 사실상 시인했음.
 - 그는 “중국도 기본적으로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입장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만일 천안함 조사결과를 통해 누구의 소행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에 요청하는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상대가 없다면 안보리에 가져가는 일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음.
 - 이와는 별도로 정부의 고위 국방 당국자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조사는 우선적으로 원인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소행인지도 드러나지 않겠느냐면서 “지금 조사는 정황증거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음.



- 국방 당국자는 “지금 조사는 일단 원인규명이라는 목표를 향해 접근해 가고 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일은 없으며, 20일께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클린턴 미국무 방한..‘천안함 공조’(5/14)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오는 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미·중 경제전략대화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클린턴 장관이 25일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양국의 공동된 인식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공동대응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정부 고위소식통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클린턴 장관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하고 들를 나라는 한국”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24일 베이징에 도착, 이틀간 일정으로 미·중 경제전략대회를 가진 뒤 25일께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장관은 방한 기간에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외교 소식통은 “클린턴 장관의 방한시점은 20일께로 예상되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여서 향후 대응조치에 관한 한·미 공조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다자와 양자 대응조치들이 폭넓게 협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비롯한 국제적 대응방안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동맹 강화 선언 등 양자적인 대응책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장관은 한국 방문에 이어 일본 측과 방문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앞서 미 국무부 당국자는 11일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클린턴 장관의 이달 중 중국방문 계획을 전하면서 “클린턴 장관이 중국 외에 다른 한 나라를 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음.

● 하스 “韓정부 천안함 대응, 증거에 비례해야”(5/14)

-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14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와 관련, “대응의 성격은 발견된 증거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하스 회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 ‘한반도비전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확정적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그는 “나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지만 한국이 확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만약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상정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비난에 대해 변호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스 회장은 나아가 “증거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이 문제에 대해 만족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하스 회장은 6자회담과 관련해선 “현 북한 지도부와는 어떤 결과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의 정책변화를 목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지도부를 교체하고 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대화에 집중해야 하고 차기 6자회담 재개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 그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현 지도부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북한의 후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스 회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FTA를 비준할 필요가 있고 이는 양국에게 ‘윈-윈전략’이 될 것”이라며 “FTA는 경제적 혜택 뿐 아니라 정치적 이득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 빅터 차 “한미, 천안함 해결 전 6자 복귀 어려워”(5/14)

-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4일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관련, “중국의 태도는 지금까지 실망스럽지만 한국의 정책에 거리를 둔다는 전략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교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 ‘한반도비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했는데 중국과 한국의 양자관계 규모를 봤을 때 한국과 북한을 따로 대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이 계속 유지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과 한국이 천안함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빅터 차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다른 도발에 어떻게 대비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천안함 조사를 통해 유엔안보리가 개입할 정도의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결의안 1874호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해양안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한 재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것(전작권 전환 시기)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전작권 협상 당시와 지금은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 **美 “2+2 협의서 北문제 논의”(5/14)**

-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은 14일 워싱턴D.C.에서 차관보급 ‘2+2 협의회’를 열어 천안함 사건을 포함한 역내 안보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13일 “구체적인 의제를 밝힐 수는 없지만, 협의회에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양국 간 의견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음. 이 당국자는 20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관여하고 있으며, 조사를 전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이번 차관보급 ‘2+2 협의회’에서는 ‘군사적으로 조정할 문제’와 관련한 양자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을지 주목됨.
-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 정부 측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장광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윌러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가 각각 참석함.

● **성김 美특사 방한, 천안함, 6자회담 협의(5/12)**

- 성 김 미국 북핵 6자회담 특사가 12일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음. 성 김 특사는 이날 저녁 시내 모처에서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찬회동, 천안함 사건 대응방안과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함. 외교부 당국자는 “위 본부장은 성 김 특사와 회동에서 지난 11일 방중 시 중국 측과 협의한 내용을 듣고 천안함 사건 조사와 관련한 우리 측 입장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그는 “천안함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런 연후에 관련국과 협의 및 공조를 통해 6자회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게 한·미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그런 한·미의 입장과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 성 김 특사는 11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함께 베이징을 방문,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비롯한 중국 외교 당국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 사건 등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중 대화채널. 긴박해진 외교전선>(5/12)**

-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의 11일 방중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G2(주요 2개국)’ 차원의 전략적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성 김 북핵 6자회담 특사가 12일 오후 한국을 비공개 방문하고 외교통상부 이용준 차관보는 13일 급거 방미길에



오를 예정임.

- 천안함 조사결과가 공식 발표되기에 앞서 미·중·한 3개국을 중심으로 6자회담 관련국들 사이에 고도의 외교적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임.
- 우선 주목할 대목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캠벨 차관보가 11일 동남아 순방 후 귀국길에 베이징(北京)에 들른 점임. 캠벨 차관보는 미국 측 6자회담 대표인 성 김 특사와 함께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중국의 핵심당국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 사건 등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해 숙의했음.
- 이는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의 연계여부를 놓고 일정한 시각차를 노출해온 미·중이 고위급 대화채널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큰 그림 잡기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특히 오는 24~25일 베이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이 대좌하는 ‘미·중 경제·전략대화’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소위 ‘G2(미·중) 컨센서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현시점에서 표면화된 미·중간의 입장차는 커 보임. 중국은 천안함 사건과 연계하지 않고 6자회담 조속 재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의 기초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캠벨 차관보와 추이텐카이 부부장의 11일 면담은 양국 간의 시각차를 ‘교정’하고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간 협의결과를 상세히 브리핑하며 천안함 사건과는 관련 없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조속히 재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커 보임. 이는 중국 장위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우리는 (각국이) 성의를 보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유연성을 발휘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한다.”고 밝힌 데서도 명확히 드러나 있음.
- 이에 대해 미국은 천안함 사건의 엄중성을 설명하며 천안함 조사와 대응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미국은 일정한 ‘속도조절’을 거쳐 6자회담의 재개 필요성에 공감할 가능성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양측의 입장차가 커 보이지만 전략적으로 타협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임.
- 중국으로서는 천안함 사건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와 동북아 역내의 분위기를 외면하기 어렵고, 미국으로서는 6자회담 재개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임. 따라서 양측은 천안함 변수를 적극 의식하면서 6자회담을 어떤 형식과 수순으로 재개할 것이냐를 놓고 큰 틀의 공감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큼.
- 미·중의 대화 움직임 속에서 한·미간 외교채널도 급하게 돌아가고 있음. 한·미는 기본적으로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이라는 기



조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지만 미·중간 전략적 대화에 따라 새로운 논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서로 보폭을 조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난 11일 베이징을 방문했던 성 김 특사는 캠벨 차관보와 떨어져 12일 오후 한국으로 향했음. 김 특사는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방중결과와 함께 천안함 대응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인식은 공통되며 기존의 원칙에서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 중국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간 캠벨 차관보는 14일 외교부 이용준 차관보와 회동함. 7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2+2 회의’ 의제 협의가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천안함 대응에 관한 협회가 주된 목적일 것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임. 향후 조사결과 발표와 향후 대응과정에서 공조전선을 구축하려는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옴.
- 특히 우리 측은 조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정부의 고위인사들이 방한하도록 하는데 외교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정부 소식통은 “미국에서 누가 올 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정해진 것 없다”고 말했음.

● 김중훈 본부장 방미, 한·미 FTA 촉구(5/12)

-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8~19일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촉구할 것이라고 외교통상부가 12일 밝혔다.
- 김 본부장은 워싱턴을 방문해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국제무역콘퍼런스와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주최 세미나, 한·미 재계회의 등의 행사에 참석해서 한·미 FTA 진전을 촉구하는 연설을 할 계획임. 또 이번 방미를 계기로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마이클 프로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민주), 찰스 그래스리 상원 재무위 간사(공화),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민주), 존 태너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민주) 등과 면담을 할 예정임.
-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김 본부장의 방미 목적은 미 행정부 발족 2년을 맞아 양국의 전반적인 경제 통상을 점검하는 것이지만 한·미 FTA가 중요한 과제이므로 조속한 비준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음.
- 안 조정관은 민주당 존 케리 외교위원장 등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거물급 여야의원들이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 진전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누군가 앞장



- 서서 이 문제를 다뤄주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음.
- 한편 안 조정관은 이날 한·유럽연합(EU) FTA 정식서명이 늦어지고 있는데 “EU의 경우 22개 언어로 번역을 한 뒤 검토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어 애초 생각했던 4월 말, 5월 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EU 측과 이야기해 보면 연내 발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무척 곤란하다.”며 “국제통상과 일치하는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계부처,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음.
 - EU 측은 한국이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의 SSM 진입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어 SSM 문제가 자칫 한·EU FTA 발효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음.

● <韓美, 천안함 발표 전후 고위채널 가동할 듯>(5/11)

- 한국과 미국의 외교당국은 오는 20일께로 예상되는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에 대한 발표를 전후해 향후 대응방안 등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채널의 가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 한국과 미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기간에 불거진 6자회담-천안함 사고조사 ‘병행론’등에도 불구하고, ‘선(先) 천안함 조사’라는 원칙을 통해 양국 간 튼튼한 공조를 재확인한 연장선상에서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대북전략을 가다듬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음.
-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이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과거 어느 때보다 한·미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양국의 외교당국도 고위급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음. 이 소식통은 “양국 고위 관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당국자의 레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즉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이르기까지 외교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과의 협의를 위해 방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임.
- 또 다른 외교소식통도 “그야말로 모든 가능성에 문을 열어놓지는 않고 있다.”면서 “미국 측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의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음. 형식과 수준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지만, 천안함 사고의 조사결과가 나올 파장 등을 감안할 때 한·미간 고위급 채널의 가동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양국 외교당국 간에 형성돼 있다는 얘기임.
- 앞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지난 6일 워싱턴D.C.에서 ‘이스트웨스트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동맹인



한국과 일본, 파트너인 중국,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6자회담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천안함 사고원인 발표 후 한·미간 고위급 협의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음.

- 미국이 이처럼 상호협의를 통한 의견조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이후부터 ‘일방통행식’ 외교와 차별화를 하겠다고 한 약속과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여겨짐. 미국 행정부는 과거 북한의 제1차 핵위기 당시처럼 북·미 양자 간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음.
- 미국은 물론 아직까지도 북핵 문제 해결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의 협의와 공조를 통한 다자적 접근방식을 거치지 않고서는 북핵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결국 다자채널의 시발점인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수위와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게 미국 정부의 인식인 만큼 향후 대북정책 좌표설정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조사발표를 전후한 한·미간 고위급 협의는 불가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한미, ‘천안함-전작권 연계’ 온도차>(5/11)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전작권전통제권 전환 이슈와 연계시키는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음.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날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두 사안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에 내정된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10일 “전작권 전환은 연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못 박으면서 천안함 사건의 주체에 대해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고 사실상 북한을 지목했음.
- 이 위원장이 두 사안을 직접 연계하지는 않았지만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판단해 이를 전작권 전환과 연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란 분석임.
- 특히 이 위원장이 천안함 사건으로 탄생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내정자라는 점에서 그의 언급은 향후 정부 판단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임.
- 하지만 이런 발언이 공개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두 이슈가 연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작권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음.
- 물론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천안함 사건이) 전작권 문제와 직접 연관시킬 사항이 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



지만 당시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밖에 안 돼 정황 증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간접 증거물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연계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커가는 형국임.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천안함 사건과 전작권 전환이 직접 연관성은 없으나 일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했고 앞선 8일에도 “군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재검토 입장을 시사한 바 있음. 이명박 대통령도 “전작권 이양문제는 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음.
- 이처럼 한미 양국이 목소리를 달리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의 양국 간 인식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누구도 결론을 성급하게 예단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조사에 의한 사실을 근거로 할 것”이라며 “편견을 갖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대응에 신중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함.
- 대응방식에서도 미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와는 사뭇 달라 보임. 전작권 전환 시기와 연계하려는 우리 정부 내 움직임과 달리 미국은 이를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행위’와 결부지어 대응하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음.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조사결과는 북한의 핵 문제는 물론 다른 도발적인 행위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음.
- 전작권 전환 문제가 아닌 다른 대응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미인 셈임. 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기류는 조만간 한미 양국 간의 공식 의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전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 재논의 의사를 내심 가져왔고 천안함 사건으로 그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임. 따라서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양국 외교·국방 장관 회의체인 ‘2+2’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앞선 6월 초 열리는 싱가포르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타진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임.

나. 한·중 관계

● 中총리, 28일부터 韓등 4개국 방문(5/15)

-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한다고 소식통들이 15일 전했다. 이들은 원 총리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뒤 30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후 몽골과 미얀마를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음.



- 이들은 원 총리가 31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만나 최근 불거진 동중국해에서의 양국 해상활동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식품안전 이니셔티브에도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상이 일본을 찾는 것은 지난 2008년 5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일 이후 2년 만임.

● 한·중 “천안함’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5/15)

- 한·중 양국은 15일 천안함 사건에 대해 “향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경주 힐튼호텔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 양 부장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사건은 불행한 사건으로 중국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명했다고 언급했으며, 현재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우리 측의 설명을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 양 부장은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우리 측은 향후 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아울러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과 역사문제, 국군포로,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국군포로와 탈북자 소환 문제와 관련, 그동안 중국 측의 협조를 평가하면서도 소환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대기시간을 단축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안 의사 유해발굴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가 나올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외교 당국자는 전했다.
- 양국 장관은 또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달 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 당국자는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리커창 부총리, 저우융캉 상무위원, 명젠주公安부장, 양제츠 외교부장 등의 방한 등 양국 고위인사의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조속히 종료하고 김포와 베이징 간 항공 셔틀의 조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 정부는 이 밖에 양국 원자력 담당 부처 및 기관 간 원전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제9차 한·중 원자력 공동위원회를 올해 안에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을 두고 양국 간 긴밀한 공조에 합의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 “韓 언론, 對中 불만 집중부각” <환구시보> (5/13)

- 한국 언론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중국에 대한 불만을 대대적으로 키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2일 비판했음.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이 신문은 ‘한국 매체가 중국에 대한 불만을 조작·선동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의 주요 신문들이 천안함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김 위원장을 맞이한 중국을 비판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환구시보의 이번 보도는 중국 외교부가 김 위원장의 방중을 둘러싸고 한국 측과 아무런 외교적 갈등이 없었다고 못 박은 다음날 나온 것이어서 여전히 중국 측이 한국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됨.
-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이 중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관해 정치적 역사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음. 한국이 중국에 대한 정서에는 한국의 반(反)대국주의가 자리 잡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한국의 경제규모를 따라잡은 중국에 대한 질서와 긴장감도 존재한다는 것임.
- 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각종 국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점도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음. 두 나라가 수교 18년간 급속히 가까워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됐지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란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상황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이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음. 이 신문은 지난 6일 중문판과 영문판에서 “한국이 중국의 김정일 환대에 불만을 표출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1면 에 크게 보도한 바 있음.

● 中 “한국과 외교 갈등 없었다” (5/11)

- 중국 외교부는 지난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둘러싸고 한국 측과 아무런 외교적 갈등이 없었다고 밝혔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예고하지 않은 중국에 항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국과 중국 모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 장 대변인은 “한·중 양국은 열린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수시로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음. 신각수 외교통상부 1차관은 지난 3일 오후 장신선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전통지나 언질을 해 주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음.
-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4일 장신선 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한 것이란 관측을 낳았음. 그러자 장위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국가 지도자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의 내부 문제며 주권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음.

- 이를 두고 한·중 관계에 갈등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르자 중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류우익 주중 한국대사에게 김 위원장의 방중 내용을 서둘러 브리핑하고 청와대도 직접 나서 “양국관계에 갈등이나 균열이 없다.”고 갈등설을 일축한 바 있음.

● 외교부 “中 ‘천안함’ 적절한 대응 기대”(5/11)

- 외교통상부는 10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 “중국 측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중국 정부도 우리 설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음.
- 그는 “현 단계에서 최선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과학적이며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우리 정부 방침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에 성의를 가지고 설명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음. 김 대변인은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브리핑에서 완전한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 남북 양측에 차별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천안함 사건 조사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음. 그는 또 ‘천안함 사건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별개’라는 장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 김 대변인은 “6자회담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라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은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 추진방안은 그러한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 한·일 관계

● 한·일, ‘천안함 대응’ 긴밀 협력 합의(5/16)

- 한·일 양국은 16일 앞으로 천안함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오카다 가쓰야(岡田



克也)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천안함 사건의 조사 진행상황을 설명했고 일본 측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지지의사를 표명했음. 김 대변인은 “일본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명했고 우리 정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는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음.
- 양국 장관은 또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올해 새로운 한·일 우호협력 100년을 향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독도,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음. 우리 측은 특히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고 일본 측은 “현재 관련자료를 계속 찾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 우리 측은 또 문화재 반환과 제3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와 관련해 일본 측의 협조를 요청했음. 한편 일본 측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조기 재개에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한·일 FTA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하지만 충분한 여건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일병합, ‘불법’ 명시 없지만 사실상 ‘불법’>(5/10)

- 10일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불법성 여부였음. 성명서에 ‘불법’이라는 글자가 마지막에 추가되면서, 성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가 철회한 일본 지식인도 많았다는 사실에서도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한일 양국 지식인들의 인식 차이를 엿볼 수 있음.
-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한국 지식인들과 달리,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는 “‘한일병합조약’은 (윤리적으로는) 불의부당(不義不當)하지만 (법적으로는) 합법”이라고 규정하는 인식이 많음. 이에 따라 실제 이번 성명서에서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문장은 찾아볼 수 없음.
- 그러나 김영호 유한대 총장은 “이번 성명서에서는 한국의 해석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불법’이라는 표현을 넣었고, ‘사실상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다른 내용도 넣었다.”라며 “한일 학자들이 그만큼 노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성명서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과거 일본 침략주의의 소산’으로 불의부당한 조약은 당초부터 불법 무효”라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을 소개하는 부분이었다고 말했음. 여기에서 ‘불법’이라는 두 글자를 마지막에 넣으면서 일본



- 학자 일부가 서명을 철회했다는 것임.
-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무효’로 해석했지만 일본정부는 ‘1945년 이후 무효’라는 해석을 유지했음. 성명서에는 또 “당초부터 null and void (원천 무효)”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음.
 - 이어 미국 의회가 하와이 병합을 위해 하와이 왕국을 전복한 행위에 대해 ‘불법한(illegal) 행위’였다고 인정하고 사죄하는 결의를 채택한 사례를 들며 일본에서도 “역사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천명하기도 했음.
 -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도 성명서가 “다소 미욕한 느낌이 들 분이 있을 것이지만, 이 성명이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라며 “(이 정도 표현이라면) 일본 지식인들이 회피의 여지를 남겼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교수는 “조약의 전문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다.”는 성명서 내용을 인용하며, “원래 ‘많은 결점과 결함’이었던 부분을 ‘중대한 결점과 결함’으로 바꾸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 부분의 표현에 대해 “국제법학자인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가 제안해 바뀐 것으로, ‘중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국제 사례상 불법으로 판결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 그는 또 성명서 초입에 한일병합 당시의 역사를 나열한 데 대해서도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가 초안을 작성한 부분으로, 일본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에 대해 서술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미야지마 히로시(宮島博史) 도쿄대 교수도 “많은 일본 학자가 아직 ‘한일병합’이 불법이라는 인식까지는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성명을 기초로 해서 올해가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서명한 (일본인 학자) 분들의 공통적인 인식일 것”이라고 전했다.

라. 미·중 관계

● <천안함-6자 재개 ‘G2 컨센서스’ 주목>(5/13)

- 미·중간의 ‘G2(주요 2개국) 컨센서스’가 천안함 외교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의 연계여부를 놓고 일정한 시각차를 보여 온 두 나라가 현 국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공감대를 잡아나가는냐가 천안함 사건의 후속대응 방향설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에서임. 이런 맥락에서 24~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경제·전략대화의 의미가 커질 수밖에 없음.
-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기조로 가느냐, 아니면 ‘천안함-6자



회담 병행'이나를 놓고 양국 사이에 큰 그림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시점에서는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얽혀짐.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장위 대변인) 6자회담을 조속히 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 '선 천안함, 후 6자회담' 기조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음.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의 11일 방중에 뒤이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1시간이 넘도록 장시간 전화통화를 가진 것은 이런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특히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이란 핵문제가 최대 현안이었지만 동북아 정세의 불안요인인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 문제 역시 주요하게 다뤄졌을 것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임. 이 자리에서 다이빙귀 국무위원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결과를 디브리핑하는 형식을 빌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자고 미국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반해 클린턴 장관은 현시점에서는 천안함 조사와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역으로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됨.
- 문제는 양국의 컨센서스가 어떤 쪽으로 기울느냐임. 이는 단순히 한반도 정세 차원을 넘어 글로벌 정세 대처에 대한 G2 차원의 전략적 이해와 상호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협력 흐름이 뒤엉킨 복잡한 이슈여서 쉽사리 방향을 잡기 어려워 보임.
- 다만 중국으로서는 천안함 사건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거부하기 힘들고, 미국도 6자회담 조속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장국' 중국의 입장을 마냥 외면하기 힘든 처지임. 따라서 양측은 천안함 사건의 대응과정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에 관한 개략적인 공감대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런 가운데 G2 사이에 놓인 우리 정부의 '천안함 외교' 행보도 주목할 만한 변수임. 천안함 외교의 핵심 포인트는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 '단호한 대응'의 효과를 이끌어내는데 있음. 정부가 12일 위성락(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성김(미 6자회담 특사) 라인과 14일 이용준(외교부 차관보)-캠벨 라인을 급가동한 것은 한·미 공조를 다지려는 차원임.
- 특히 12일 저녁 회동한 위 본부장과 성김 특사는 천안함 조사 결과가 나온 뒤 6자회담 대응 방향을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을 상대로도 직·간접적인 외교채널을 통한 설득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성김 특사는 중국이 '조사 결과를 일단 보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형식과 시기 결정도 일정한 외교적 함의를 떨 수밖에 없어 보임. 정부 소식통은 "아직까지 조사결과 발표가 빨라질 지, 늦춰질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러



나 공식발표 전이라도 중국 등 주요국을 상대로 충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천안함 이후 中の 對北포용, 美 낙담케 해”(5/10)

-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여준 포용적인 태도는 그동안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북한 및 이란에 대한 제재에서 협조를 얻어내고자 했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10일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
- 이 신문의 프레드 하이아트 논설주장은 ‘김정일에 대한 중국의 융성한 환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46명의 한국 해군 장병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 규명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 중국 당국이 한국 측에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허용하고 김 위원장을 극진히 환대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논평했음.
-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과 여타 고약한 국가들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통해 확인된 중국의 포용적인 대북 정책은 이러한 기대감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임.
- 이 칼럼은 한국의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 김 위원장이 이번 중국방문을 통해 10만t의 식량지원과 1억 달러의 원조라는 선물을 받아냈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진정한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칼럼은 최근 수년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 책임 있는 주주’로 여기며 중국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된 업적은 살인적인 김정일 북한 체제를 연명시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 중국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한·미·일 3국이 대북 지원을 줄였을 때 부족분을 중국이 채워줬으며, 특히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제지를 받지 않음으로써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더라도 북한이 (군사적 제재와 같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 칼럼은 논평했음.
- 따라서 북한 핵프로그램을 제어하고 이란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희망해온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 지도부가 보여준 김 위원장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는 낙담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이 칼럼은 밝혔다.



마. 중·일 관계

● 中외교부, 日외상 핵감축 발언에 반발(5/16)

- 중국 외교부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아무런 이유 없이 중국의 핵무기 정책을 공격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음.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은 16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핵무기 감축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은 정당하고 투명하며 질책 받아야 할 게 없다.”면서 일본 외상의 발언을 직접 겨냥했음.
- 앞서 오카다 외상은 15일 경주에서 열린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에 가입한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중국만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면서 “중국이 핵무기를 감축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음.
- 이에 대해 양제츠 외교부장은 그 자리에서 “중국은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은 어떤 형태의 핵무기 확충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음. 중국 정부는 이날 마 대변인을 통해 대응 강도를 더 높였음.
- 마 대변인은 “중국은 핵무기의 전면 금지와 철저한 폐기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자위적 핵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핵무기를 선제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 비(非) 보유국 또는 핵무기 비 보유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다.”고 덧붙였다.
- 또 “중국은 어떤 형태의 핵군축 경쟁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핵역량을 국가안보 수요의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 대변인은 아울러 일본 외상에게 “사실을 존중하고 중일 양국관계와 양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日 외상, 中에 핵감축 요구(5/16)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에게 핵무기 감축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음. 마이니치신문은 오카다 외상이 15일 오후 경주에서 열린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에 가입한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중국만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핵무기의 삭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 오카다 외상은 “중국이 핵무기를 감축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이에 대해 양제츠 외교부장은 “중국은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음.



- 양제츠 외교부장은 또 “중국은 어떤 형태의 핵무기 확충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해 직설적으로 핵무기 감축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 오카다 외상은 중국 함대의 헬리콥터가 지난달 8일과 21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에 근접 비행한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재발방지책을 요구했고, 양제츠 외교부장은 “일본 측의 감시 활동이 지나쳤다.”고 불만을 표시했음. 두 나라 외교장관은 영해가 겹치는 동중국해 등에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양국 방위당국 간 연락체제를 구축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했음.

● “中, 日 언론 가스전 ‘편향 보도’ 불만”(5/13)

- 중국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과 관련, 언론의 편향보도를 ‘지도감독’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3일 보도했음.
- 교도통신은 일본과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공산당 간부와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동중국해의 시라카바(白樺. 중국명 춘샤오<春曉>) 가스전 개발과 관련, 일본 언론의 보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시라카바는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해역임.
- 양국은 2008년 6월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협상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양국 영토의 경계선에 있는 가스전 가운데 시라카바의 개발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고 아스나로(砵檜. 중국명 룽징<龍井>) 남쪽 해역에서는 공동 자원탐사를 한다는데 합의했음.
- 중국은 하지만 일본 언론이 ‘공동개발하기로 했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음. 춘샤오는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동개발’이 아니라 출자 등을 통한 단순한 ‘개발 참여’라는 입장임.
- 이와 관련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이 시라카바 개발에 출자는 하지만 공동개발은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일본의 언론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음.

바. 기 타

● 대만 前당국자 “中과 핫라인 있다” 인정(5/16)

- 대만의 전직 고위 안보관리가 대만·중국 정부 간 비밀 핫라인이 있음을 최초로 인정했다고 대만 연합보(聯合報)가 16일 보도했음. 수츠 전 대만 국가안보위원장은 연합보 인터뷰에서 대만이 중국과의 오랜 적대관계에도 이 핫라인 덕분에 2008년부터 관계개선을 꾀하는 과정에서 상호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음.



- 올해 초까지 위원장에 재직했던 그는 국가안보위가 중국 본토의 관계당국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면서 핫라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를 거부했음. 쑤 전 위원장은 “내 집무실에는 핫라인이 없었다.”며 “내가 본토 당국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 위험부담이 너무 컸을 것”이라고 말했음. 대만은 2008년 집권한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대(對)중국 교역관계 증진을 천명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됐음.

● <한·중·일 외교장관 ‘경주나들이’..미묘한 분위기>(5/16)

-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천년고도’ 경주를 방문한 3국 외교장관들이 16일 불국사와 천마총을 찾았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오카다 가쓰야(岡田 克也) 일본 외무대신과 함께 불국사 경내를 둘러봤음. 유 장관은 “불국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사찰로 과거에는 현재 규모보다 10배 정도 더 컸다.”고 소개했고 양 부장과 오카다 외상은 “아름답다.”라는 찬사로 화답했음.
- 일주문과 천왕문을 거쳐 불국사 경내로 들어간 3국 외교장관들은 일반인에게 통행이 금지된 청운교와 백운교를 통해 대웅전으로 올라가 석가탑과 다보탑을 관람했음. 이들은 이어 바로 옆의 극락전으로 이동, 현판 아래 있는 황금돼지상을 어루만지며 3국간 우애를 다진 뒤 천마총을 찾았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 한편, 유 장관을 사이에 둔 양 부장과 오카다 외상은 불국사를 관람하는 내내 서로 아무런 대화 없이 입을 굳게 다물어 눈길을 끌었음. 전날 양자회담에서 일본 측의 핵군축 문제 제기로 중국이 불편해진 심기를 드러냈다는 후문임. 외교 소식통은 “어제 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이 중국 측에 핵군축을 강하게 요구해 중국 측이 불편해했다고 들었다.”며 “중국 측이 오늘 불국사와 천마총 관광 일정에 불참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러시아 동부가스전 개발참여 본격화(5/16)

- 러시아의 주요 자원 개발 프로젝트인 동부지역 가스전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됨.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방식(PNG) 채택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시베리아 가스 도입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프롬 간 핫라인을 설치,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임.
- 지식경제부는 오는 20일 러시아에서 이 나라 에너지부와 제10차 한-러 자원협력위원회를 열고, 동부지역 가스전 개발 사업 참여를 비롯해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현안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러시아 동부가스전 개발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정부 간 논의를 통해 협의를 구체



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러시아는 총 280억 달러를 투입해 낙후한 동부지역 가스전을 개발, 러시아 전체를 하나의 가스 배관으로 연결하는 동부가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러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유럽 일변도인 천연가스 수출 체계를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우리나라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스 자주개발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가스 시장에서 위상도 변할 수 있음.
- 한 관계자는 “동부가스 사업은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며 “최근 러시아 재정 상태가 안 좋아져서 계획 자체가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규모 자체는 굉장히 방대하다. 다만 전략광구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 회의에선 시베리아 지역 천연가스 도입 방식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협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은 애초 북한을 경유한 PNG 방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지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자 PNG 방식을 포함해 액화천연가스(LNG), 압축천연가스(CNG) 등 3개 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했음.
- 연구 결과 경제성 측면에서는 PNG 방식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정치적 측면 등을 고려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임. 한 당국자는 “공동 타당성 조사는 일단 끝났고, 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이 채널을 만들어 구체적인 도입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파이프라인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올해 중에만 결론이 나면 무리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 지역 석탄개발 및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문제도 논의됨.

● 한·중·일 외교장관, ‘천안함’-6자회담 협의(5/15)

-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은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4차 3국 외교장관회의와 별도의 양자회담 등을 열어 천안함 사건과 북핵 6자회담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 이 자리에서 유명환 외교부장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오카다 가쓰야(岡田 克也) 일본 외무대신에게 그동안 진행해 온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원인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3국 외교장관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다수의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애도를 표했음.
- 유 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3월 26일 발생한 한국 해군선박의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다수의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애도를 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향후 대응조치 강구 등에 있어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중국 측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음. 양 부장은 유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은 불행한 사건으로 중국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명했으며, 현재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우리 측의 설명을 경청했다고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 양 부장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은 또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6자회담에 대한 기존의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오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동북아 정세에 대해 논의하면서 중국은 6자회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중국은 최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참가국들이 회담 재개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6자회담 프로세스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는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호한 대응을 한 뒤 6자회담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간다는 한국 과 미국, 일본 등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됨.
- 3국은 아울러 지난 10년간 진행돼온 3국간 협력사업을 점검·평가하고 미래공동비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이와 함께 이달 하순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와 주요 국제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3국 장관은 또 지난해 10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구두 합의된 ‘한·중·일 상설사무국’ 설치를 문서로 합의하는 방안을 협의했음. 유 장관은 “한국이 의장국으로 주최하는 29~30일 제주 개최 예정인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문서, 신규협력사업 및 부대행사 개최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며 “3국 협력 사무국의 한국 내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한·중·일 3국 협력이 3국의 공동발전은 물론 지역과 세계의 평화, 번영 및 안정이 기여할 수 있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이 밖에 내년 5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한·중·일 “천안함 침몰 사건에 애도”(5/16)

- 한국과 중국, 일본은 15일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다수의 인명이 희생된데 대해 애도를 표했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오카다 가쓰야(岡田 克也) 일본 외무대신은 15일 오후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4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유 장관이 전했다.
- 유 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3월 26일 발생한 한국 해군선박의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다수의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애도를 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3국 협력의 진전 성과에 만족을 표했다.”면서 “한·중·일 3국 협력이 3국의 공동발전은 물론 지역과 세계의 평화, 번영 및 안정이 기여할 수 있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음. 3국 외교장관은 내년 5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음.

● **日게이단렌-中, 韓中日 FTA 체결 노력키로(5/12)**

- 일본 재계 최대 단체 게이단렌(經團連)과 중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3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음. 중국을 방문 중인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 게이단렌 회장은 12일 베이징에서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면 중·일 양자 FTA와 함께 한·중·일 3자 FTA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천 부장은 중국이 “중·일 양자 FTA와 한국과 3자 FTA 체결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고 게이단렌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게이단렌 대표단은 오는 15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자 FTA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음.
- 한·중·일 3국은 이달 초 정부와 재계, 학계가 참여한 가운데 3자 FTA 협상과 관련한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미타라이 회장 등 게이단렌 대표단 13명은 지난 11일부터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임. 이들은 이날 오전 양제츠 외교부장과 조찬을 함께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만날 예정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